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2009. 6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2009. 6

김 국 신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	2
1.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유산	2
2.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기초	4
3.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응	7
III. 정상회담 합의 내용 분석	12
1. 북핵 불용과 한·미공조	12
2. 한·미동맹 공동비전	13
3. 성과와 의의	16
IV. 정책적 고려사항	18

I. 문제제기

- 2009년 1월 20일 출범한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을 선언하는 한편, 미·일·중·러 4국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함.
 -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건강 및 후계 구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체제안정 도모
-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4.5)한 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이에 반발하여 2차 핵실험(5.25)을 단행하고, 유엔 안보리가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자 이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우라늄 농축에 착수하고, 재처리를 통해 생산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겠다고 선언
- 한반도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6.16, 워싱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원칙을 재천명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함.
- 본 보고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을 검토하고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를 분석한 후 향후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II.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

1.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유산

〈한·미동맹 재조정〉

-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시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협의하여 한·미동맹 재조정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음.
 -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을 통하여 용산 기지 이전 및 미 2사단 재배치 등에 합의('04.9)함.
 - 한·미 국방장관회담('07.2.23, 워싱턴)에서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한·미 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06.2.3)한 후 1년 이상의 협상을 통해 2007년 6월말 FTA 협정에 공식 서명함.
 - 그러나 양국 의회는 각기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의 반응을 의식하여 비준을 늦춤.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공조〉

-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공동보조를 취하며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07.9.27~30)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문(10·3 합의)을 채택함.

- 북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변 5MW 원자로, 재처리시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 3곳의 불능화를 완료하고,
-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제공하며 핵 물질·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

○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 구상'에 기초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한·미관계의 강화와 국제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하였음.

- 그러나 북한은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반통일'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남북대화 중단

○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08.4.19, 워싱턴)하고 '21세기 전략적 동맹' 구축, FTA의 연내 비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등에 합의함.

- 부시 대통령은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

○ 북한이 대남 강경조치를 취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 추구하자,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함.

- 김정일 위원장이 열병식에 불참('08.9.9)한 후 뇌졸중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 북한체제의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도 구체적으로 협의

-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08.10.17,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유사시 적절한 군사력의 신속 제공과 한국에 대한 보완전력 지속제공 등을 포함한 공동 성명을 채택함.
- 한·미 양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긴밀한 공동보조를 취했으나, 북한이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부시 행정부는 비핵화 2단계를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임기를 끝마침.
- 즉, 6자 수석대표 회담('08.12.8~11)에서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짐.
 - 한국과 미국 등은 시료 채취(샘플링)를 검증의정서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
 - 북한은 시료 채취는 비핵화 2단계협상에서 논의 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
 - IAEA 역할, 검증 시기, 미신고 시설 접근 등에 대해서도 입장 대립

2.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기초

〈한·미 양자 관계〉

-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유지·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부시 행정부 시절 한·미간에 체결한 군사·안보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입장

- 주한미군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관한 합의 준수
- 경제·통상정책에 관해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외국의 시장을 개방하며 공정무역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기본 입장 표명
 -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 지연
-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에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희망함.
-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한·미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
 -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및 실무자 회담을 통해서 대북정책 조율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집권하면 북한·이란 등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오바마 행정부 정권 인수팀은 ‘강인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한다고 밝힘.
-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적 공세를 강화함.
 - 외무성 대변인은 북핵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

- 됐으므로 비핵화를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담화 발표(1.13)
- 당시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 후보자는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선(先) 핵 폐기, 후(後) 북·미관계 정상화’의 원칙을 강조
-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3일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미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하며,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1.17)힘.
 - 한편, 북한군 총참모부는 북한이 정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 고수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1.17)하여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시사
 -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후 클린턴 국무장관은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2.13)에서 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지속 추진, ②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병행 추진 등을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함.
 - 그 후 클린턴 장관은 동아시아 순방길에서 “나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2.16)힘.
 - 미국의 대북정책이 핵폐기보다 핵확산 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혹 해소

3.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의 로켓 발사와 유엔 대북제재〉

-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국을 방문(2.20)하여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 북한은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2.24)한 후, 미 국무부는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입장 표명
-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대북특사는 한국·일본·중국 등을 방문(3.2~10)하여 북핵 6자회담 재개문제와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한 대책 논의
- 한편, 북한-중국 국경지역에서 취재하던 미국인 기자 2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 불법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3.17)했음.
-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 런던 G-20 정상회담(4.2)을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한 검증 가능한 북한 핵폐기가 한·미간 공동목표임을 재확인함.

- 북한은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운반로켓 ‘은하2호’를 발사(4.5)함.
 - 북한은 로켓에 실린 인공위성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
 -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평가
- 당시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난(4.5)하고,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를 강력히 추진함.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4.13)함.
 -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 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4.24)함.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자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및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4.14)을 발표함.
 - 영변 핵 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IAEA 모니터 요원들을 추방하고,
 -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작업 시작

- 북한 외무성은 또 다시 성명을 발표(4.29)하여 제2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경수로 발전소 연료 자체 해결(우라늄 농축) 등의 추가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시사함.
- 북한은 그 후 2차 핵실험을 강행(5.25)하고,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여 무력을 시위함.
 - 2차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은 리히터 규모 4.4 정도로 탐지되었음.
- 우리 정부는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정식참여를 공식발표(5.26)함.
 - 그러나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임을 확인
- 한·미 정상간의 통화(5.26)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PSI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오바마 행정부는 PSI를 강화하여 국제기구로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
-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한국의 PSI 참여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5.27)함.
 -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

-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부장관, 레비(Stuart Levey) 재무부 차관, 보스워스 대북특사 등 미 정부 고위 대표단은 서울을 방문(6.2~5)하여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 방향 및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함.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15개국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결의안 1874호를 채택(6.12)함.
 - 1874호는 북한의 1차 핵실험('06.10.9) 직후 채택된 1718호를 확대 보강한 것임.
- 1874호는 34개 조항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 1718호는 탱크와 장갑차, 대포 등 중화학 무기류를 금수 대상으로 했으나 1874호는 소형 무기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함.
 - 북한행, 북한발 화물 검색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화물 검색 가능 장소도 확대
 - 1718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금융 자산을 동결토록 규정했으나 1874호는 무상원조와 금융지원, 차관 신규 계약금지 등으로 금융제재 대상을 확대
 - 북한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용도에 대해서는 공적인 금융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
-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직후 북한 외부성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농축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해상 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 대응조치를 선언(6.13)함.

- 또한 “핵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고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며 핵보유국 지위 주장
-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6.15)함.
 -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증진을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

Ⅲ. 정상회담 합의 내용 분석

1. 북핵 불용과 한·미공조

-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등 도발적 행동에 대해 확고한 한·미 공조체제에 기초하여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함.
 -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합의 사항 발표

〈북핵 불용의 원칙 천명〉

- 한·미 정상은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천명함.
 -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차단 및 금융제재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합의

〈북한의 행동 패턴 변화 촉구〉

- 양국 정상은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 경제적 보상을 주고 대화를 재개하는 기존의 대북협상 방식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함.
 -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에는 북한이 호전적으로 행동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식량·연료·자금 등을 지원 받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이 같은 행동 패턴을 깨겠다는 의지 표명

〈6자회담 참석 5개국 협력 강화〉

-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불가역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는 보다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함.
 - 5개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폐기를 압박한다는 구상

2. 한·미동맹 공동비전

- 양국 정상은 또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동맹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채택함.
 - 부시 대통령과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을 한 차원 더 높게 구체화한 것으로,
 -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위주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차원으로 발전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함.

- 개방된 사회 및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 양국 국민들의 우의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짐.
- 한·미 안보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며, 양국 동반자 관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로 확대되어 왔음.
 -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함.

〈확장된 억지력 지속 보장〉

-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위태세를 갖춘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킴.
 - 미국은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하는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를 지속적으로 보장함.
- 한·미동맹 재조정 계획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은 한반도 방위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함.
 - 이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합의를 재확인하는 내용

〈한·미 FTA 진전 및 경험확대 노력〉

- 한·미 양국은 경제·무역·투자 협력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며, 한·미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함.

-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
 -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연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도 협력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및 북한 인권 개선 협력〉

-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추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함.

〈한반도 평화구축 및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지향〉

-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함.

〈아·태지역의 공동 평화·번영 증진〉

- 한·미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해 역내 기구 및 협력 상대들과 함께 노력함.
 - 양국 정부와 민간 기구들은 아·태지역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증진
-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역내 국가간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 신뢰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내 협력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참여함.

〈범세계적 안보·경제·인권 협력 강화〉

-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 범죄와 마약, 기후 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함.
 - 이라크·아프간에서의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함.
 - 범세계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20개국(G20)와 같은 다자 협의기구에서 협력을 강화함.

3. 성과와 의의

- 한·미 정상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대북정책을 단호하게 추진한다는 양국의 확고한 공동입장을 재천명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미국이 핵우산 및 포괄적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는 ‘확장 억지’를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명문화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공고한 결속을 재확인해주고 있음.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 뿐만이 아니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폐기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대북 압박 수위가 강화되었음.
 - 대북 압박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

-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비전으로 제시되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공유를 한반도 평화통일의 원칙으로 명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방향을 제시하고 통일 이후에도 한·미관계가 지속·발전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음.
- 한·미동맹을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분야까지 포함 하는 진정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아·태지역 및 범세계 적 차원으로 확대해나가는 미래지향적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로 인해 보호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양국 의회의 비준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
-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G20 등 다자 체제에서 한·미 양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 적 위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

IV. 정책적 고려사항

-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따라 한·미동맹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 등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와 실무회담을 통하여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함.
 - 한·미 양국의 공통된 국가이익과 정책 수단 등을 고려한 치밀한 준비
- 한·미 양국의 의회 및 민간단체들 사이의 접촉의 폭을 확대하여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대한 정치·사회적 지지 기반을 더욱 확충
 -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설득 강화
- 범세계적 차원의 한·미 경제·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프가니스탄 지원 등 미국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비책 마련
-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악화에 대비한 안보태세도 더욱 강화함.
 - 일본·중국·러시아 등과도 대북정책에 관한 협력체제 강화
-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는 김정일 건강, 후계 구도 등 북한 내부사정과 연계되어 있어 ‘벼랑끝 외교’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그러나 북한의 취약한 경제상황은 국제적 고립을 무한정 지속하기 어려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 내부 상황을 주시하며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공조체제에 바탕을 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일 경우, 미국은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임.
 - 특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가입기간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9-07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7(代), 팩스 : 901-2543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9년 6월 일
발행일	2009년 6월 일
